생명과 충북 태양의 땅

2015. 9. 10

- 제342회 임시회 대집행부질문 -

보충질문 서면답변서

충청북도

목 차

□ 박 병 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종합안전대책 및 상임
부위원장의 역할 ---------- 1

2.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차원에서 재난안전실장을
겸직하게 한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 ---------- 3

3. 타 시·도 재난안전실장의 겸직 현황 ---------- 3

4. 상임부위원장 겸직에 대해 사전에 의회와 전혀
협의없이 인사발령을 한 이유 ---------- 4

5. 위기관리 정책보좌관의 상근 전문가 초빙에 대해
2014년 5월에 검토한 내용과 당선 된 후 민선 6기에
보좌관 도입에 대해 준비했던 내용 ---------- 5

6.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안전도시 추진에 입장과
도입방안 ---------- 9

1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종합안전대책과 상임부위원장의 역할

□ 엑스포의 종합안전대책

○ 종합안전대책 수립 : 2015. 9.

○ 종합상황실 운영

- 인 원 : 총 19명
- 역 할 : 행사 총괄 관리, 주요상황 점검 및 관리, 대외협력 등 비상 상황 발생대비 대응 전략 강구 등

○ 안전관리대책

- 안전요원 배치 : 공무원, 경찰, 소방, 사설경호원 등

※ 1일 운영요원 433명

- 주공연장 안전대책 : 공연시설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강화
- 행사장 경호·경비 : CCTV 활용 및 행사장 지속 점검(순찰)
- 시설물 안전대책 : 정기 및 수시점검

※ 기반시설·전기·통신·건축·출입·판매시설·안내소 등

- 안전사고 보험가입 : 관람객 및 종사자 등

○ 소방·방재대책 : 소화기 비치, 119안전센터 설치 등

○ 보건·의료대책 : 진료소 운영(의사·간호사), 제세동기 비치

○ 위생대책 : 식중독 위생점검(매일)

※ 엑스포 종합안전점검 : 2015. 9. 16(수) / 도·괴산군·유관기관 합동

□ 상임부위원장의 역할

○ 최근 일련의 행사장 안전사고 사례의 여파로 인해 대형 행사시 국민 안전에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판교 테크노벨리 행사공연중 환풍구 붕괴 사망사고('14.10), 대구 국제안경전 홍보부스 붕괴사고('15.4)

○ 재난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상급 책임자를 겸임토록 하여 유기농산업엑스포 종합안전대책과 관련, 상임부위원장은 도 및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등 안전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함.

※ 금년 하반기 대형 국제행사는 **유기농엑스포(66만), 대나무 박람회** (90만) 뿐으로 전 국민 관심대상임.

2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차원에서 재난안전실장을 겸직하게 한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

○ 현, 재난안전실장은 2급 상급자로 그동안 정책기획관, 안전행정국장, 의회사무처장 등 풍부한 도정 경험을 통해 충북도 뿐 만 아니라 중앙 및 시·군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적임자임

○ 또한,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행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기농산업엑스포의 각종 현안 해결에 최적임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겸직토록 하였음

3 타 시·도 재난안전실장의 겸직 현황

○ 없 음

④ 상임부위원장 겸직에 대해 사전에 의회와 전혀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한 이유

○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선임은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정관 시행규칙 및 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선임절차에 따라 2015. 7. 15일 재단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였으며,

○ 강호동 재난안전실장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상임부위원장으로 선임하게 된 것은 세계최초로 개최하는 유기농산업엑스포의 중요성에 비추어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과 안전행정국장 등 도정의 주요 직위를 역임하면서 각종 대규모 국제행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탁월한 추진력 등을 두루 겸비한 고위직으로서 최적임자라는 판단과 본연의 재난안전에 관한 직무수행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겸직토록 하였음

○ 다만, 선임·위촉과 관련하여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재난안전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은 물론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림.

5 위기관리 정책보좌관의 상근 전문가 초빙에 대해 2014년 5월에 검토한 내용과 당선된 후 민선6기에 보좌관 도입에 대해 준비했던 내용

□ 위기관리 정책보좌관 검토내용

민선6기 보좌관(자문관) 운영계획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민선6기 보좌관(자문관) 운영계획

도지사의 **올바른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과, 새로운 정책 설계, 현안 과제에 대한 방향 제시** 등 민선6기 도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Ⅰ. 운영방향

○ **공약사항 이행** 추진 (교육보좌관·위기관리보좌관 신설)

○ **민선6기** 조직구성 방향에 따라 現**보좌관 기능전환**

○ 특정 분야 정책방향 제시 위해 보좌관(자문관) 분야 확대

- 상근 보좌관제 지양, **비상근 자문관제** 확대

※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운영** 시, 현업 유지 가능

Ⅱ. 세부 운영계획(안)

□ 비상근, 무보수 명예 "자문관" 운영

○ 현재 운영중인 보좌관 외,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을 위해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인 **"자문관"** 운영

○ 운영방법 : 관련규정 제정 * (안) 붙임 참조

- **(가칭) 충청북도 정책자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관련분야 지정 (분야 지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교육정책, 위기관리, 농업정책, 노사협력** 등 10개 분야 내외

⇒ 규정제정 및 자문관 위촉 (정책기획관) ※ 정책자문단과 구분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

‣ **구성인원** : 5개분과 70명 (2014. 7.현재)

- 공공혁신(11), 복지여성(14), 문화관광환경(16), 산업정책(1), 지역발전(14)

‣ **주요기능**(자문·협의기능)

- 도정의 장기발전 방향 및 주요정책(새로운 정책 포함) 결정 등
- 현안사업 대처·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도정 정책자문단」과 자문관 운영 차이점

- 회의개최 방식 운영(자문단), 사안 발생 즉시 자문 가능(자문관)

○ 교육정책, 위기관리, 농업정책자문관 우선 위촉 활용

충청북도 정책자문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 - *<예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정 주요정책 결정과 관련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 정책자문관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2.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주민 등의 도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정책자문관은 도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정책자문관의 위촉분야는 **교육정책, 위기관리, 농업정책, 노사협력, 경제과학, 투자통상, 문화관광, 생태환경** 분야 등으로 한다.

제4조(임기) 정책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정책자문관의 자문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정책자문단 운영규정>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정책자문관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연구과제, 정책자문 등 활동실적에 따라 필요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도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정책자문관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민선6기에 정책보좌관 추진과정

○ ‘14. 7월 공약검토 : 위기관리전문 보좌관제 검토

* ’14. 7월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개최 2회(7.23, 7.29)

○ ‘14. 8월 계획수립 : 민선6기 보좌관(자문관) 운영계획

* ’14. 9월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개최 1회(9.19)

○ ‘14. 9월 공약확정 : 「위기관리 자문관」 시행

* 평가자문위원회 검토의견 : 상근직 보좌관제 운영보다 사안 발생시, 필요시 자문을 구하는 비상근 자문관제 운영이 바람직

○ ‘14. 11월 훈령제정 : 「충청북도 정책자문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 ‘15. 1월 정책자문관 위촉 : 4개 분야 5명(위기관리분야 이재은*)

*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 국가위기관리학회장 역임

⑥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안전도시 추진에 입장과 도입방안

□ 안전도시 개요

○ 사 업 명 : 도내 11 시·군 WHO 국제안전도시 지정 추진

○ 사업기간 : 사업 추진 시점부터 5년(5년마다 재인증 절차)

○ 사업내용 :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상분야, 지역민 대상의 안전증진사업을 국제적으로 인증

○ 소요예산 : 총 110억원 (도비 55, 시군비 55)

□ 추진입장 및 도입방안 ⇒ 장기검토

○ 인증절차상 기초지자체 선 인증 필수로 해당 시장·군수의 의지가 필요

○ 예산과다소요 및 추진기간의 장기화

※ 안전도시 인증소요기간 : 통상 4년 준비 후 5년째 인증

○ WHO의 경우 국제기구에서의 신인도 있는 증명력 이외의 지원사항이 전무하고 매년 회비(11,000천원) 지급문제, 5년 후 재인증시 기존 초기 비용이 다시 투입되어야 하는 등 효과성에 대한 검토 필요

○ 2년마다 국제학회를 유치해야하는 등 예산 및 행정력 과다소요

○ 중앙정부차원의 별도의 안전인증제도 도입 검토 실시